

“미래세대 부담 덜겠다”… ‘국민연금 구조개혁’ 공약 봇물

6·3 조기대선

주요 후보, 청년층 표심잡기 나서
자동조정장치·정년연장 등 제시
“차기 정부, 구조개혁 본격화 전망”

오는 6월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들이 공약 경쟁에 돌입하면서 ‘국민연금 개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여·야 합의로 통과된 연금개혁이 청년 세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높아 ‘국민연금 구조개혁’이 주요 화두다. 각 후보는 연금개혁과 관련된 공약을 통해 ‘청년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18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 후보 경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8일 진행된 A조 토론회에는 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 후보가 맞붙었고, 20일 B조 토론회에는 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참여해 정치 현안에 관한 입장과 공약을 제시했다.

A조의 조별 토론 주제로는 ‘청년 미래’가 제시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 교체 여론이 강해지면서 중도층 확보가 여당 측 후보의 최우선 목표로 부상한 데 따른 것이다. 2030세대는 대표적인 ‘스윙보터(선거마다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을 바꾸는 유권자)’로 꼽힌다.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 데이’ 행사에서 홍준표(앞줄 왼쪽부터 반시계방향), 유정복, 이철우, 김문수,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양향자 경선 후보가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날 조별 토론에서 후보자들이 가장 많은 논의를 주고받은 키워드는 ‘연금개혁’이었다. 앞서 여·야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현행 9% 수준인 보험료율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까지 올리는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해당 연금개혁안은 기성세대 부양을 위해 청년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지속 가능한 연금을 목표로 국민연금 2차 개혁을 즉각 시행하겠다. 연금개혁 논의에도 세대별 인구비에 맞춰 청년들을 충분히 참가시켜, 그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가가 나서서 조정하고 보장을 책임질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유정복 후보는 “앞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연금개혁안은 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기 위해 청년들에게 부담을 떠넘긴 졸속 처리 법안”이라며 “연금 문제의 핵심은 저출생·고령화와 더불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연금 수급자인 만큼, 연금 피크제를 도입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안철수 후보는 “다음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를 두 개의 부서로 나눠 보건부와 질병관리청을 하나의 부서로 합치고, 나머지 부분은 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포함해 새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면서 “해당 부서 내에 청년부를 신설해 (연금 문제를 비롯한) 청년 문제를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후보.

/뉴시스

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대 통합’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B조 후보들 사이에서도 연금개혁과 관련된 공약이 나왔다. 나경원 후보는 청년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연금과 청년이 내는 연금을 분리하는 ‘신연금제도’의 도입을 주장했고, 홍준표 후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한 연금개혁추진단의 출범과 더불어 정년 연령을 단계적으로 70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금개혁이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만큼 여당 바깥에서도 ‘연금개혁’에 대한 공약이 속도를 내고 있다.

연금개혁이 ‘과락을 간신히 면할 60점’이라고 평가했던 김동연 민주당

후보는 최근 청년 지지자들을 만나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번 연금개혁은) 구조개혁 없이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야합”이라며 “이번 연금개혁을 무위로 돌리고, 연금 자동조정장치, 신연금제도 도입 등 세대별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여당과 비슷하거나 더 개혁적인 안을 내놓을 개연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특히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정권창출에 성공하면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한화에너지 등 3社 참여… ‘승계’ 논란 해소 기대

한화에어로 유상증자

3차 배정 통해 1.3조… 사용계획 보충
“정밀 심사시 6~7월까지 결릴 수 있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가 유상증자 통과를 위해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심사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승계자금’ 논란은 여전히 꼬리표가 붙어 있지만 글로벌시장 확장이란 당면 목표를 향해 기민하게 움직인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의 심사에서 통과할 경우 논란은 종식될 것으로 보여 금융당국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화에어로 유상증자와 관련한 증권신고서 상 자금 사용계획이 불분명하고,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된 시장의 의혹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지난 17일 해당 신고서를 두번째 반려했다.

이에 한화에어로는 자료를 보완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승계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화에어로가 유상증자를 밀어 붙이고 있는 이유는 최근 급성장중인 방위산업분야에서 글로벌 확장을 하는데에 투자 적기라는 판단에서다.

유럽연합(EU)의 재무장으로 방산 수요가 늘어나는 데다 당분간 국내 시장에선 대규모 무기 체계 사업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동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가격



한화그룹 본사 사옥 전경. /한화그룹

경쟁력과 품질 성능을 갖춘 국내산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국내 방산 업체들이 향후 5년간 확보할 수 있는 잠재적 시장 규모는 최대 849억유로(약 134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에어로는 글로벌 무인기 시장이 오는 2040년 50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해 유상증자 자금 중 3000억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 유증 증권신고서 제출에서 금감원이 심사 통과를 결정하게 될 경우 ‘승계자금’ 논란도 자연스럽게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에어로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한화에너지, 한화임팩트파트너스, 한화에너지싱가포르 등 3개사가 1조 3000억원 규모의 제3차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한화오션 지분 매각대금으로 한화에어로가 지급한 1조3000억원이 다시 원상복귀되는 만큼 금감원의 반려 이유 중 하나인 ‘한화오션 지분매매 관련 내부 의사결정 과정 기재 미흡’이 해소된다. 금감원의 심사 결정은 일정 부분 타당성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심사 통과는 ‘승계자금’ 논란 종식을 뒷받침 하게 되는 것이다.

김대중 세종대학교 교수는 “금감원이 유상증자를 승인한다고 해서 곧바로 승계자금 논란이 완전히 종식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금감원의 승인 자체가 일정 수준의 요건과 타당성을 갖추었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승계자금 논란이 약화되거나 수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금감원이 앞선 두 차례 신청을 반려한 바 있어 이번 세 번째 신청은 이전보다 더욱 정제된 자료와 구조를 기반으로 제출 했을 것”이라며 “만약 심사 과정에서 추가 보완 없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면 5월 중 승인도 가능하고 정밀 심사가 요구된다면 6~7월 정도까지 결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화에어로의 주가는 유증 신고서가 반려된 지난 17일부터 연사흘째 종가기준 최고치를 경신, 이날에는 전날보다 0.24% 오른 83만원에 장을 마쳤다. 일각의 승계자금 논란에도 시장의 시선은 사상최대규모 유증을 통한 글로벌 시장 확대에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2대 주주 지분매각 조건 ‘도마위’ “경영권 지킬 것” vs “믿을 수 없어”

카카오모빌리티 매각설

사측, 경영권 관련 조항 목록부담
노조측, 지분매각 반대 투쟁 지속

카카오모빌리티 2대 주주 지분의 향방을 두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카카오 노조는 사모펀드에 회사 지배권을 넘기지 말 것을 요구하며 지분 매각 반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는 경영권을 넘기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히면서도, 2대 주주의 지분 매각 조건에 카카오가 경영권을 내주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따로 입장이 없다고 했다.

21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노사 갈등의 핵심 쟁점은 2대 주주의 지분 매각 조건에 추후 카카오가 경영권의 일부 혹은 전부를 넘기는 조항이 포함됐는지다.

카카오모빌리티의 2024년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지분율은 카카오가 57.2%로 가장 높다. 이어 카키홀딩스 14.29%, 킬로미터홀딩스 6.17%, 모빌리티코인베스트 5.34%, 모빌리티홀딩스 3.4% 순이다. 이들 모두 TPG컨소시엄 소속 펀드로 2대 주주인 사모펀드 TPG의 합산 지분율은 29.2%에 달한다.

박성의 카카오지회 수석부지회장은 “TPG가 가진 지분을 사고파는 건 우리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다”면서 “다만 TPG 지분을 VIG가 사들이는 거래 조건

<카카오모빌리티 지분 현황>

주주명	지분율
카카오	57.2%
카키홀딩스	14.29%
킬로미터홀딩스	6.17%
모빌리티코인베스트	5.34%
모빌리티홀딩스	3.4%
엘지	2.46%
구글	4.52%
기타	9.62%

*2024년 사업보고서 기준 /카카오모빌리티

에 3년 내 카카오모빌리티가 IPO(기업공개)를 못 하면 카카오에서 경영권을 넘겨줄 만큼의 지분을 매각한다는 내용이 있는 게 문제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2대 주주인 TPG가 지분 매수 의사가 있는 VIG와 매각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확인했다”면서도 “다만, 카카오에서 말하기를 ‘경영권까지는 매각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제보를 근거로 사모펀드에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영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회사 측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IPO 실패시 카카오가 경영권을 내주는 게 거래 조건에 있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카카오는 별도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김현정 기자 hjk1@